

[종합·해설]

“정책 국감 한다더니…” 파행·정쟁 되풀이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흐르고 있다.

18대 국회는 출발 당시 ‘갈등과 대결’의 17대 국회를 뛰어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정치 국감’, ‘여야 정쟁’이라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발(發) 금융위기 때문에 따른 총체적 경제위기,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개혁과제 등 국회가 점검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대안 제시가 아닌 상호간의 흡집내기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실망스러운 국감 =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정책 국감보다는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정부 흡집내기’에 나서고 여당은 ‘여당 공세 방어하기’식의 고전적인 정쟁 대결구도가 답습되면서 ‘생산적 국감’이 아니라 ‘소비적 국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6·7일 이를간 계속된 국감에서는 ‘좌권형 대우편형’이라는 색깔논쟁까지 덧붙여졌으며 그 결과는 일부 상임위의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실 국감 원인=이 같은 상황은 18대 국회가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대선, 지난 4월 총선 등 숨 가쁜 정치일정을 진행해온 여당은 곧바로 쇠고기 정국을 맞아 새 국회를 위한 체비를 갖추기보다 진용 정비(여당), 장외투쟁(야당)에 몰두해야 했다.

더욱이 국회 출범 이후 82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 의원 개개인이 국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꼽을 수 있다.



YTN의 구본홍 사장에 반대하는 전현직 노조원에 대한 대량 징계사태 여파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종로 YTN본사를 방문한 민주당 전병현(오른쪽부터), 송영길, 조정식, 장세환, 변재일(왼쪽) 의원이 이홍렬 보도본부장 직무대행(왼쪽 두번째)에게 현 시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첫 국감, 준비 부족에 과거 행태 답습 ‘부실’ 우려

종부세 개편안·멜라민 파동 관련 與野 접점찾기 ‘희망’

한마디로 건전한 정책대결을 위한 체비가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의 폭등, 주가 폭락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 등 대형 악재는 국민의 눈을 국회에 고정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책 국감 희망=일부 상임위의 파행과 맞물려 국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책국감’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간 노력도 눈에 띈다.

여야는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면서도 ‘일정수준 개편’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감 직후 이뤄질 종부세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감에서 여야간 접점찾기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급격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으며,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기존의 종부세를 그대로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부실대응,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을 질타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비판·대안 제시…장관 출신 의원들 ‘눈에 띄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장관 출신 의원들의 활약상이 돋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장관 출신은 강운태(내무부 장관), 이용섭(건설교통부 장관), 조영택(국무조정실장), 박지원(문화부 장관), 김영진(농림부 장관), 박상천 의원(법무부 장관) 등 모두 6명.

이들 가운데 이용섭, 강운태, 박지원, 조영택 의원 등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감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교부 장관 출신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이용섭 의원에게 이번 국감은 곤혹스럽다. 참여정부 후반기 건교부 장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 대상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집행한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꼬끄러운 상황에서도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9·19 부동산대책’이 주택정책 보다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서민주거 안정면에서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세정에도 밝은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여론조사 근거까지 들어가며 막아서는 등 민주당 세제 분야 대표 주로 자리 잡고 있다.

내무부 장관 출신으로 기획재정위에 속한 강운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려 세 도입의 대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어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아고리에 국정감사 사이트를 열어 국민의 제안을 받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는 국감에 나서 신선향 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용섭·강운태·박지원·조영택 의원 등

풍부한 행정 경험 바탕 ‘정책 국감’ 주도

문화부 장관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예상 밖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원했으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감사원장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가 하면 국감질의에 혼장의 목소리를 반영, 역시 ‘박지원’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영택 의원도 과거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문화 수도 사업 등과 관련, 문화부에 칼날 같은 질의를 펼쳤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질의를 기대했던 문광부는 조 의원의 송곳 질의에 오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J 투어몰 오픈기념초특가 이벤트

EVENT. 01

제주도 힐링
여행

174,000

11월 10일 ~ 11월 15일

EVENT. 02

제주도 힐링
여행

350,000~
430,000~

11월 10일 ~ 11월 15일

EVENT. 03

제주도 힐링
여행

549,000

11월 10일 ~ 11월 15일

EVENT. 04

제주도 힐링
여행

579,000

11월 10일 ~ 11월 15일

李 대통령 “달러 사재기 욕심 버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달러가 자꾸 귀해지니까 달러를 사재기한다”면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르고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업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부 사람도 있는 것 같으나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의 욕심을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회장단·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위기 때문에 사재기하는 기업이나 국민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을 강타하고 있고 이것이 아시아까지 올 위기를 갖고 있으나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3국은 1조8천억 달러가까운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라과 같은 직접적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與野 “금융위기 대처” 한 목소리

불안감 해소·금융위기 진단 해법 제시 등 당력 집중

한나라당이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긴급 비상금융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여·야가 금융위기 대응책 마련에 당력을 결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정부가 연일 치솟는 환율과 바닥을 모르고 주락하는 증시에 대해 잇따라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백악이 무효인 상황에서 “금융위기 자체보다 불안감이 더 큰 문제”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희태 대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엄청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아직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외환위기 기에 대한 불안감이 위기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외환보유고 부족설’에 대해서는 “올해 6월 현재 총외채는 4천198억 달러지만 통계상 외채로 잡힌다고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 상황이 IMF 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금융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은행 리스크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 신용보증의 확대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위험관리 대책 마련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방침 철회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대안을 전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브리핑

‘뒷돈 선거’ 공개 사과해야

고 물려나겠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진보신당 광주 북구 당원모임은 이와 함께 북구의회 회의록을 인용, 북구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짜인 각본에 의해 치러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선관위 ‘핵심당원 연수’

○…진보신당 광주 북구 당원모임은 8일 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북구의회의 ‘의장 뒷돈선거’ 의혹과 관련, 민주당의 관련자 문제와 구의회 의원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이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 위원장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오간 거액의 금품수수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취하고 부당한 청탁과 개입을 극복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의사가 있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이들은 또 구의회 의원들에게 “김재균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지, 어떠한 근거로 서명했는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책임지 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당관계자 대상 민주시민교육연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김지율 기자 jkpark@